

#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안 수용... 품목 확대 추진

### 민주, 법 일몰 폐지 막기 위한 교육지책... 여야 합의 기구 구성 제안 민노총,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14일 2차 총파업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여당 안을 전폭 수용해 안전운임제 법안 폐지를 막으면서 국회 내 논의를 통해 품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 회의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날 밤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3년 연장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과 적용품목을 철강·위험물·자동차(카캐리어) 3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3+3 중재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했으나 '파업 철거가 우선'이라며

받들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재차 비공개 석상에서 5+1(5년 연장, 품목 1개 추가)안, 3+1(3년 연장, 품목 1개 추가)안 등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 또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토위는 재차 30명에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2명, 정의당 1명으로,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과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강행처리 대신 정부여당 안을 전폭 수용하기로 한 것은 법사위에서 법안이 막혀버리면 법 자체가 일몰 폐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법과 원칙'을 앞세워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여론이 점차 호응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민

주당 국토위원들은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어 "만약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후 안전조정위원회가 신청되거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결국 2주 지나 일몰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제도의 폐지만큼은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로 보름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

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한편, 정부가 이날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4일 2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탄소중립위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참석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농어촌 '상생의 협치 모델 촉진법' 국회 통과

####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협치모델 촉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소멸 지원 법안 중에 21대 국회 최초로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 지방소멸 문제와 농어촌 회생의 대안을 제시한 두 번째 법안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업의 회생의 대안으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농어촌은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인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



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 가지는 취지이다.

앞서 지난해 12월과 2021년 5월 농협경제연구원 및 수산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2021년 9월에는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여 정부 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협치모델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 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한동훈 "헌법 초월한 통치 없어" 文 전대통령 소환 가능성

### "文 '대북송금 DJ 관여 뎀 책임져야 한다' 말해"... 與 대표 차출설은 일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차기 여당 대표 차출설'에 "중요한 할 일이 많기에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리를 뒀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 도 그 생각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정계에서 당 대표 제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도권·MZ

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 대표론'을 언급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관저에서 한 장관과 회동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그의 차출설에 이목이 쏠렸다.

'정당동 솔자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라는 것이 저질·가짜 뉴스를 유투버와 협업해 뿌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김 의원이나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슬을 받을 때고 있다.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실 분들이 아닌데 우리 다 알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제인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엔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지를 뒀다.

그는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천정배 "지방상원·국회양원제 도입해야"

###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 "강력한 지방분권형 민주정부 수립"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호남 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은 8일 "지방 소멸과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상원제와 국회양원제 기반으로 강력한 지방분권형 민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이사장은 이날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광주희망포럼, 청정포럼, 시민총회, 시민캠프 등 4개 단체가 공동 개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천 이사장은 '한국정치개혁과 호남정치가 나아갈 방향' 주제의 강연에서 광주와 호남이 중심이 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국가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남의 경제적 낙후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로 지방상원제 도입을 통한 국회양원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상원제 도입과 국회양원제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견제하고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킬뿐만 아니라 광주, 호남의 낙후는 물론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대안이자 개혁 방향이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

## 신안동, 상업용지

-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10층, 72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3억

## 대인동, 상업용지

- 롯데백화점 부근
- 대지 15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9층, 64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0억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 중 17층
- 계 14평, 전 9평
- 무등산 방향
- 일조권 전망최상
- 사무실 전용
- 매매 - 6100만원

## 덕남동, 임야

- 전대병원 부근
- 지분매매, 2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도로접
- 개발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6천만원

상담 및 문의. 010 - 4159 - 9700